#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\_\_\_\_\_ 검 토 보 고 \_\_\_\_

# 1. 제 안 경 위

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: 제3062호

다. 제출일자: 2025. 8. 11.

라. 회부일자: 2025. 8. 14.

## 2. 제 안 사 유

-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.
-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 3. 주 요 내 용

가. 출자 개요

○ 대상: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

출자규모: 노후 열수송관 교체 60억원(2026년)

#### 〈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〉

(단위: 억원)

구분	소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	699	59	200	140	240	60

#### 나. 필요성

-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. 이를 위하여 '26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.
  - 2026년 노후 열수송관 5.2km 정비

# 4. 참 고 사 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 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○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

**제53조(출자)**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 ② ~ ③ (생략)

나. 예산조치: 2026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.

## 5. 검 토 의 견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사용 연수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 60억원('26년)을 출자하기 전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¹)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-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에 대한 서울시(이하 "시) 출자는 당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59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나, 출자 계획이 세 차례 변경되면서 출자금은 699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, 연도별 출자금은 2024년 140억원, 2025년 240억원, 2026년 60억원으로 조정되었음.

#### <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연도별 추진(예정) 현황>

(단위: km, 억원)

구분		소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
진단구간		265	20	174	35	36	-	
교체구간 (누계)	계획(최초, '22.)	49.6	2.6 (2.6)	13.2 (15.8)	9.6 (25.4)	11.0 (36.4)	13.2 (49.6)	
	계획(변경, '23.)	41.6	3.4 (3.4)	9.1 (12.5)	8.0 (20.5)	9. <b>4</b> (29.9)	11.7 (41.6)	
	계획(변경, '25.)	<b>26.7</b> <sup>2)</sup>	3.4 (3.4)	3.0 (6.4)	6.0 (12.4)	<b>9.1</b> (21.5)	<b>5.2</b> (26.7)	
	실적	13.5	3.4 (3.4)	3.0 (6.4)	6.0 (12.4)	1.1 (13.5)	-	
출자금	계획(최초, '22.5.)	659	59	190	136	142	132	
	계획(변경, '23.8.)	659	59	200	240	160	0	
	계획(변경, '24.8.)	659	59	200	140	200	60	
	계획(변경, '24.10.)	699	59	200	140	<b>240</b> <sup>3)</sup>	60	
	교부	639	59	200	140	240		
	집행액	456	59	109	224	64	-	

<sup>※</sup> 예산 금액, 공사 현장 여건, 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.

<sup>1) 「</sup>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<sup>2)</sup>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변경계획(公社 열수송기술부-724, '25.5.26.).

<sup>3) 2024</sup>년 제324회 임시회 출자 변경 동의: 200억원 → 240억원(20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214억원, 목동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26억원).

서울에너지공사는 시 출자금(699억) 범위 내에서 노후 열수송관 전체 물량 (41.6km)의 64%인 26.7km를 교체할 계획임('26년 5.2km 교체).

#### 〈2026년 서울에너지공사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추진(예정) 현황〉

구분	사업 대상					
	구간	관경(mm)	공사내용	배관길이(km)	소요예산(억원)	공사기간
동북권	중랑천(2.3공구)	700A	성능개선	3.70	42	′26.1.~12.
	당현천(중계지구)	750~450A	65개인	1.58	18	
	합계			5.28	60	

<sup>※</sup> 공사구간, 소요예산 등 사업내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나. 검토의견

○ 노후 열수송관 교체는 계속사업(5개년)으로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시의회 동의<sup>4)</sup>를 받아 왔기 때문에 금번 출자 자체에 대한 이견 없으나, 동의안에 사업비 내역 없이 열수송관 교체 길이와 금액만을 제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본 동의안에는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2조의45)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기관 개요,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, 규정에 맞게 동의안이 작성·제출되어야 할 것임.

○ 교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, 2025년 말 기준 교체 대상 21.5km 중 13.5km에 대해서만 교체되는 등 일정이 지연(출자금 집행률 71.4%)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.

또한,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교체 물량을  $41.6km^6$ )에서 26.7km로 조정하고 잔여 구간인 14.9km는

<sup>4) 2022</sup>년~2023년 출자 동의안('22.5.), 2024년 출자 동의안(''23.8.), 2025년 출자/변경 동의안(''24.8.,10.)

<sup>5)</sup> 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sup>1.~3. (</sup>생 략)

<sup>4.</sup>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<sup>5.</sup>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<sup>6.~8. (</sup>생 략)

<sup>6)</sup> 전체 열 수송관 438.8km 가운데 20년 이상('04년 이전 매설) 경과 노후 구간은 265km이고 이 중 안전진단 "C등급" 받은 구간을 포함한 41.6km임.

공사 자체 예산으로 우선순위 선별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지만, 아직까지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교체·보수 계획이 마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.

이러한 일정 지연 및 계획 부재는 2024년 목동 공동구 인근 열 수송관 누수 사고로 인해 양천·구로구 5만 8천여 세대의 온수·난방 공급이 중단<sup>7)</sup>된 사례에 미뤄 볼 때, 노후 열수송관 운영에 따른 안전 공백이 우려되고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.

따라서 C등급 이상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적인 관리·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·종합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임.

<sup>7)</sup> 추석 앞두고···양천·구로구 5만 8682세대 온수·난방 공급 중단(중앙일보, '24.9.13.)